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1.9.(수) 회의 종료시(별도 공지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2.11.8.(화) 07:00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인용 (044-200-2396)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0-2416)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현장규제 집중 개선

◇ **문화재 분야 행위제한 규제 대폭 개선, 기업·국민부담 완화**

◇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1.6조원~27년 투자 창출**

◇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2,500억원~26년 투자 촉진**

< 주요 규제개선 과제 및 기대효과 >

【 1.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 → 전국 보존지역 2,577㎢ 재검토**

* (수혜사례) 부산 구포동 당숲 규제범위 86만㎡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50만㎡ 규제 해제

2 문화재청·지자체 주도 **전국 광역 지표조사**, 개발사업자의 **광역 지표조사 의무 면제 → 사업기간 40~50일 단축**

【 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1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 완화 → 민간투자 1.6조원 창출**(~'27년) 예상

2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 지정하여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 도입 **→ 첨단·친환경 선박 장비 투자 등 12.5조원**(~'27년) **경제 효과**

【 3.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1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등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 선도**

2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허용 **→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약 2,500억원 투자**(~'26년) **촉진**

□ 정부는 **11월 9일(수) 인천 항만**((주)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8월에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을 본격화하였고,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여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환경규제 혁신방안, ②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③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직접 챙기고 끌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번 회의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인천 항만 현장에서 개최**되었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의 2.6%인 2,577㎢)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해제 등)**하여,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은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 지역을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혁신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디지털 기술의 초격차** 이행 등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된다.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문화재청 】

【사례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축소(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조선백자 요지(사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2층 규모의 카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토지의 처분이 어려워 경제적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최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합리화**로 **허용기준이 완화**되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마침내 **카페를 오픈**할 수 있었다.

【사례2】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확대(충남 공주)

충남 공주에 사는 30대 B씨는 100년 전에 건립된 노후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말끔하게 보수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한옥 신축 위주에서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확대**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B씨와 같은 주민들은 **불량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는 **한옥과 근현대 건축자산이 잘 어우러진 역사도시 경관**을 갖추게 되었다.

□ **문화재청**은 꼭 필요한 **문화재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등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를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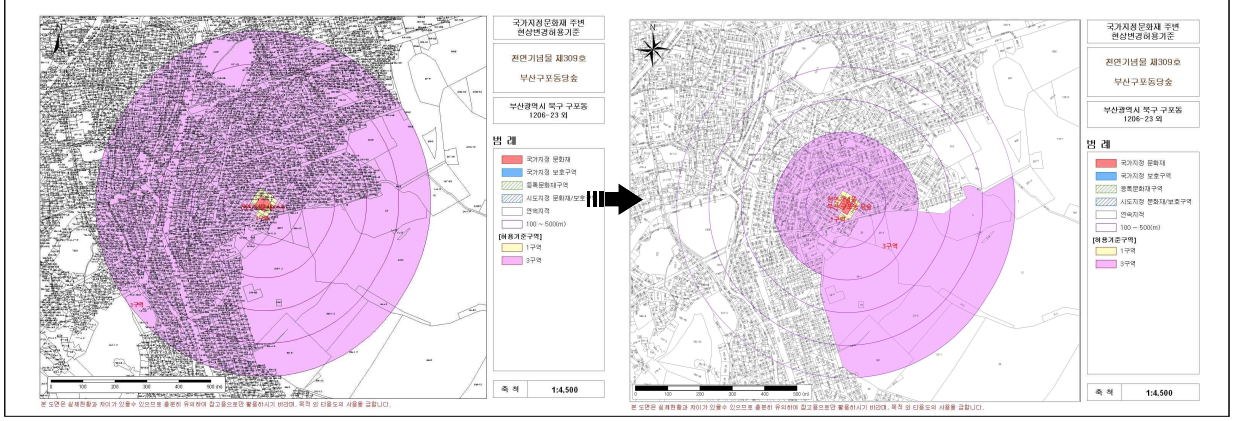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축소**하고,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한다.(총 1,665건 허용기준 검토·조정)

※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인 2,577㎢ 재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축소】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 (당초) 500m 기준 855,990㎡ → (조정) 도시·녹지지역 혼재 200~500m 기준 35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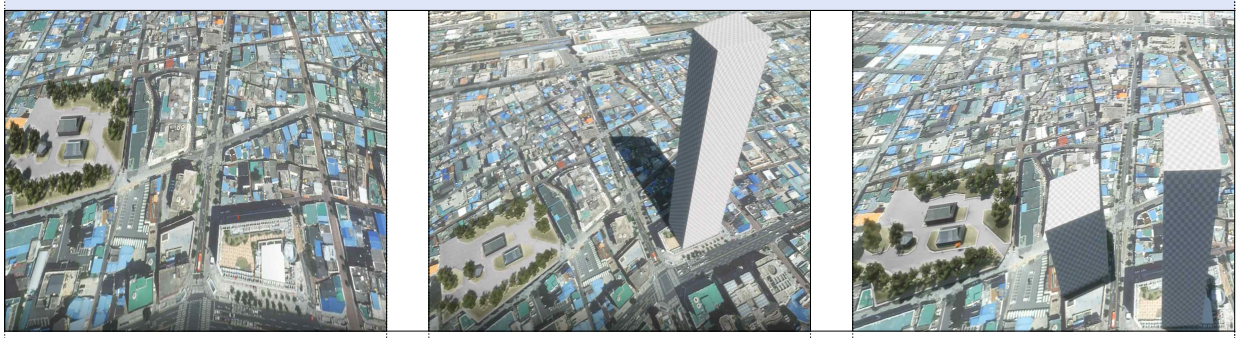
⇒ **규제범위 504.912㎡ 해제(▼59.0%) 예상**



○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가데이터 공개·활용을 통한 민간 개발사업 등 지원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대구 경상감영 현상변경 3D 시뮬레이션 결과



현상변경허가 신청 전	현상변경 불허 (지상53층/ 197m)	현상변경 허가 (지상35층,44층/ 142m)

○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장문화재 **조사·보존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 문화재청·지자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 중심(전국토 대비 약 20%) 지표조사 의무 면제

□ 고도(古都)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편도 해소**한다.

○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해양수산부 】

【사례1】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전남 광양의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으로 물류업을 하고 있는 C사는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스포츠 밴드 완성품을 제작·가공하고자 하였으나, **물류업에서는 원재료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공 활동이 가능**하여 할 수 없었다.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규제개선**을 통해 C사는 물류활동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활동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2】 친환경·신기술 선박 기자재에 대한 민간주도 형식승인 제도 도입

친환경선박 연료의 저장장치를 개발한 D사는 제품에 대한 실증 이력을 확보한 후 국내 연안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납품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 개발한 설비에 대한 **정부의 형식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민간전문기관의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D사는 **조속히 형식승인**을 받게 되어 국내 조선소에 조기 납품은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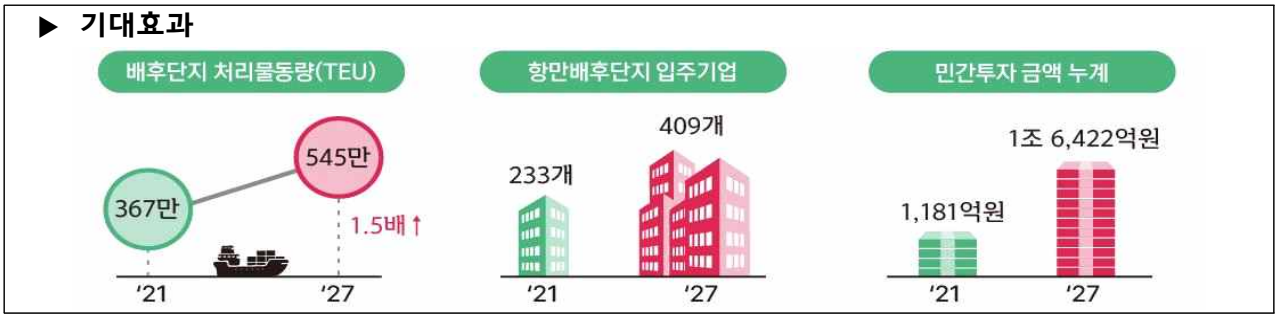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 이를 통해 '27년까지('21년 대비)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5배 증가**(367만 TEU→545만TEU), **입주기업 76% 증가**(233개→409개)와 **민간투자 누계 1.6조원**('21년 1,1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기대효과**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12.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친환경·신기술 설비 인증절차 간소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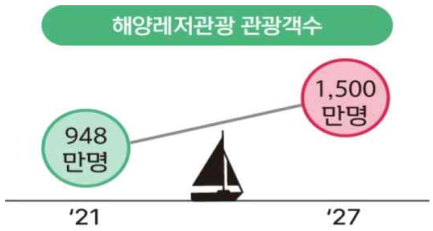
현행	신기술 (사업자)	→	안전기준 제정(정부)	→	시험평가 (지정기관)	→	형식승인 (정부)	→	검정 (검사기관)	→	**상용화**
개선	신기술 (사업자)	→	**민간 전문기관 검증(예 : 한국선급, 전기연구원 등)**							→	**상용화**

○ 또한, **마리나선박대여업의 기항지 정박** 및 **하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 규제를 합리화**하여 '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1,500만명**('21년 948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의 범위 확대**(패각류→갑각류), **해양심층수 소금 별도 분리**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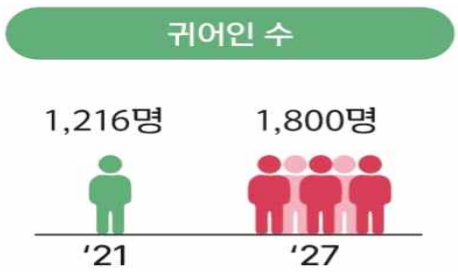
친환경선박 · 첨단선박장비	**'21년 2.2조원 → '27년 12.5조원**



□ **수산업과 어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도 혁신**한다.

○ 어항시설에 쇼핑센터·음식점 설치 허용 등 **어촌 진입장벽 완화, 어업 생산·유통 규제 합리화**로 '27년까지('21년 대비) **귀어인 수 48% 증가**(1,216명→1,800명), **어촌마을 관광소득 250억원**('21년 184억원)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 **기대효과**



【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례1】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85㎑)

경기도 고양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실증사업 중인 E사**는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권고되고 있는 **85㎑ 대역**을 해당 용도 **주파수로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제 해당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로 분배**되고, **국제표준을 근거로 한 기술기준이 공급**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사례2】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 지원

반도체 생산설비를 만드는 F사는 수많은 부품 탑재와 장비 유지·보수로 **부품 수요가 항상 발생**하나, 부품 수입 시 전파법 상 받아야 하는 **적합성 평가**로 인해 필요한 **부품이 적시 공급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등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면서 **통관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이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우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무선충전기기 설비 설치 부담 완화***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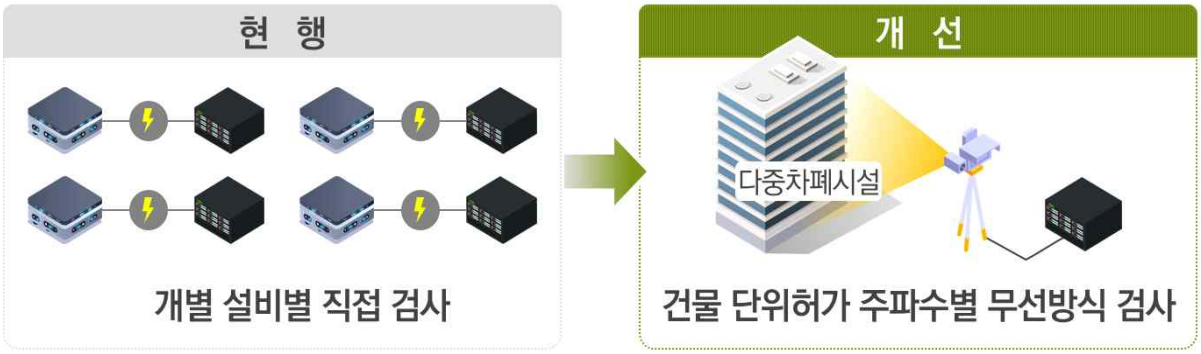
* (현행) 같은 기기라도 장비 설치 시마다 적용하는 허가 제도 → (개선) 단계적으로 제품별 인증제도로 전환

○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을 저전력으로 정밀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파이용 장비의 검사방식을 변경***하여 공정 중단 없는 검사 실시로 **기간을 단축**(약 7일→1일)하고, **LED 조명기기의 업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 (현행) 개별 설비별 직접 검사 → (개선) 건물 단위 허가 주파수별 무선방식 검사
** (현행) 제품마다 정부지정기관 시험·평가 → (개선)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

< 전파이용 장비 검사방식 개선 >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 우선,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 의제를 적용**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 이를 통해,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사업용 1개월→0.5개월, 공공용 1년 이상→1개월)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을 단축**하여 '30년까지 **약 1천개소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약 3조원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 또한,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설비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을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와이파이 등 **국민들의 통신 복지를 확대**한다.

□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약 1~2개월→1일)하고,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대신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리화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84m^{2}인 경우 △(현행) 업무용, 9회선 → △(개선) 주거용, 1회선 설치

【붙임1】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붙임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붙임3】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별첨1】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별첨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별첨3】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인용 (044-200-2396)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0-2416)
<공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변지현 (042-481-4652)
		담당자	사무관 유철웅 (042-481-4648)
<공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성열산 (044-200-5160)
		담당자	사무관 정제영 (044-200-5166)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2-6420)
		담당자	사무관 조경래 (044-202-64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

문화재청

0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현행	개선
문화재 주변 (일부)일률 500m 설정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 등 500m 설정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규제범위 59% 해제

02 디지털규제시스템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현행	개선
· 원인 규제 결과 예측 어려움 · 각종 허가 이원화	· 디지털 규제시스템 구축으로 규제결과 3D 확인 가능 · 보존조치·현상변경 허가 일원화

· (디지털규제시스템) 예측가능한 규제행정 실현
· (문화재영향진단제도) 민원처리기간 30일 단축

03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현행	개선
개발 사업 시, 개인이 지표조사 의무 실시	전국 매장문화재 분포지도 구축, 발굴조사 여부 지자체 판단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 40~50일 단축

04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현행	개선
소규모 건설공사만 발굴조사비 지원 및 보존조치로 개발 불가시 토지 매입지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 및 보존조치 이행·관리 국가지원 확대

개발사업자 조사·보존조치 비용 부담 경감(142.5억원)

05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현행	개선
· 8개 민속마을 일괄 건축행위 제한 · '고도 이미지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한옥으로 제한	· 민속마을 정비기준 마련, 생활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 · 지원대상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

민속마을 주민(19억원) 및 고도지역 건축자산 소유자(42억원) 부담 경감

붙임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미래를 여는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기본 방향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 + 덩어리 규제 혁파 + 성과중심·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

01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항만배후단지

시설·자격 기준 완화

- 배후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 제조업 겸업 허용 조건 완화
- 입주가능시설을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

해양공간이용

규제 차등화·합리화

-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차등화
- 바닷가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0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자율운항 · 친환경선박

특례 도입

- 시험운항 및 실증 특례 신설
- 신기술 인증 업무 민간 전문기관 이관

마리나 산업

특성에 맞는 기준 적용

- 섬과 관광지를 들르는 호핑투어 등 허용

해양바이오

제도적 발판 마련

-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 해양심층수 소금 분류 신설

03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 혁신

어촌소멸 대응

진입장벽 해소

- 임대형 양식장 도입
- 어항시설 내 입주시설 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수산업

성과중심 규제 혁신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및 참여업종 대상 기존 규제 합리화
- 민간 주도 수산물 이력제로 전환

붙임3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1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 UWB 적용 허용	반도체공장 장비 검사제도 개선	LED 기기 적합성 평가 부담 완화

2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

이음 5G 활성화

이음5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이음 5G 단말기
신속 활용 지원

광케이블, 지자체 자가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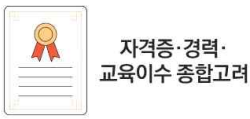
시내전화 구리선의
광케이블 대체 구축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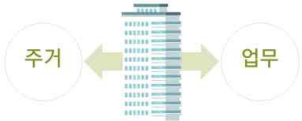
네트워크 구축 인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 강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
인력 수급애로 해소



3 디지털설비 활용관련 현장애로 개선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산업용 기자재 통관 절차 완화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규제 완화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 합리화